

“정전때 예비전력 24만kW 불과”

최중경 “사실상 허위보고... 자리 연연 않을 것” 수습후 거취 정리

지난 15일 조유의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과다계상 행위가 있었고, 적기 대응에 실패한 지식경제부는 이를 사실상 ‘허위보고’로 규정했다.

정부는 정전 피해자들에게 신중을 받아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하고, 최종경 지경부 장관은 ‘선(先) 사태수습-후(後) 거취정리’의 입장을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경부의 정전사태 원인파악을 위한 사실관계 예비조사 결과 “전력공급능력의 허위계상이 있었다”며 “사실상 허위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에 따르면 발전기가 처음 예열상태를 거쳐 발전 상태로 가려면 5시간 걸리는데, 예열하지 않은 발전용량 201만kW를 공급능력에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2시30분까지만 해도 이미 기온이 오름대로 오른 상황에서 지경부에 보고된 예비전력이 350만kW 내외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140만kW 정도로 내려온 것이라고 최 장관은 전했다.

최 장관은 “그 상황이 오후 3시 다 돼서 (지경부에) 통보됐다”면서 “그러나 이 140만kW에도 사용하기 곤란한 용량이 포함돼 있었기에 실제 예비전력은 24만kW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급용량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또한 “이번 문제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고개숙인 최중경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전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先)수습-후(後)거취정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사태 진상조사와 필요한 대책 마련 뒤 ‘책임있게’ 물러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김황식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총리실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시 대응체계 개선 및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유의 정전사태에

다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마무리된 뒤 사퇴토록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대통령 “나도 분통터지는데... 정전 책임져야”

한전 불시방문 질책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를 불시에 방문, 전날 발생한 ‘정전사태’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한전과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가 전력사용량 예측 오류, 홍보 부족 등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한전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력거래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얘기하라”면서 노여움을 감추지 않았다.

정전사태의 원인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단전에 앞서 매뉴얼은 없느냐, 자기 마음대로 (전력 공급을) 자르고 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경부도 책임이 있고, 전력거래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전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말해 추후 관계자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분을 지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은 세계적인 국영회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오피스빌딩이나 공공건물, 이런 데는 (긴급사태에) 전기를 끊어도 되지만 병원과 엘리베이터, 전기로 작업하는 중소기업에 무작위로 끊는다는 것은 기본이 안된 것”이라며 “수요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생각 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같이 이상기후가 있고 기상청에서도 늦더위가 와서

매일매일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전기수요가 올라가니까 끊어버리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건 다 받고 투철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 내가 분통이 터지는데 실제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 전력거래소와 지경부는 전날 순환 정전을 실시하기 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관리센터는 지경부의 사후 보고를 받은 직후 이 대통령에게 정전사태 현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두우 전 靑 수석 검찰, 이번주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역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이번 주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게 당초 19일께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전 수석 측에서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 시기를 2~3일 늦춰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누翟된 부실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김 전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현섭 연루 지방의원 엄정 재판을”

여주시민단체, 대법원에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16일 오현섭 전 여수시장 뇌물사건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 비리사건은 지역사회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시민의 관심이 높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개혁연대는 “특히 내년 5월 열릴 지역의 큰 희망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진다면 비리도시라는 오명

될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거듭 촉구했다.

전·현직 여수시의원과 도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이나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에는 여수 시민협,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노조여수시지부, 민노총여수시지부, 민노당여수시위원회, 진보신당여수시당원협의회, 국민참여당여수시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서울시장 보선 겹쳐 ‘정쟁국감’ 예고

국감 핫이슈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20일간 실시될 올해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민생대란, 복지포폴리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간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감 직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정쟁 국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FTA비준안=매년 국감 현장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한미 FTA 협정 비준안은 올 국감 최대의 관심사다. 해외국감이 많은 외통위 일정상 FTA 비준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방은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FTA 재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한미 FTA·남북관계 등이 포함된 미 외교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FTA 이면합의 또는 굴욕외교 여

한미 FTA·민생 해법 대치 가능성

무상복지 등 복지포폴리즘 공방도

부를 집중 과해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대란 해법·책임=물가 급등과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문제 해법과 책임 소재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민생’으로 정하고, 대형마트의 지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정책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747’(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공약의 허구성을 공격하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물가 폭등 현상의 연관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홍보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의 각종 친서민·민생 정책을 이번 국감을 통

해 최대한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포폴리즘 논란=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여야의 복지 정책에 대한 포폴리즘 논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을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각하고,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예산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동시에, 전면 무상급식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보다 시급한 복지분야의 예산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he new Audi A6
영향력을 만든다

Progress, 영향력을 만드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기술에서 The new Audi A6의 새로운 영향력은 시작됩니다. 견고한 강성과 15% 더 가벼워진 무게의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바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교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풀타임 사륜구동 콰트로. 운전자의 직관을 따르는 Head-up display와 MMI touch. 그리고 아우디의 기술적 혁신을 강렬한 LED 디자인으로 표현한 제논 헤드라이트까지. 이것이 당신의 영향력을 만드는 Progress입니다. www.gojin.com

Vorsprung durch Technik Audi

신뢰의 이름 - 아우디 Gojin Motors 공식 딜러 Since 2000

광주전시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1-1 Tel. (062) 525-8777